

서울시, 국내 첫 '성평등 임금공시제'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성별 임금격차 개선 힘쓴다

男 100만원 벌 때 女 63만원 벌며
불합리한 격차 위한 정보 공개
서울시 '임금격차 개선 TF' 꾸려

한국에서는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3만원을 받는다. 올해 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7%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16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서울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서울시는 근로자들의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직급, 고용형태, 경력에 따른 임금 차이와 실제 근로시간, 휴가, 휴직 사용률 등 노동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우선 시는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정보를 오는 10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시는 여성·노동학계, 시민대표, 기업인, 성평등·일자리위원회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성별임금격차 개선 TF'를 꾸렸다. TF는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와 문제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달 중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상호협력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끌어낸다는 목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채용에서부터 배치, 승진 등 고용의 전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성별임금격차를 고착화시키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시도"라며 "노동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

는 정보 공개 범위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제-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안전-여성 안심환경 조성 ▲성평등-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부문에서 총 7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1976년 부녀복지관에서 시작한 24개 여성일자리기관을 통합 브랜드 '서울시 여성일자리' (가칭)로 개편한다. 시설별 분석과 컨설팅,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여성창업 허브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은 내년 9월 대방동 옛 미군기지 자리에 문을 연다. 공간제공에서부터 컨설팅, 해외 판로개척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 'SS존(Safe Single Zone)'을 조성하는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 이중창과 방범필름, 창문경보기, 스토퍼, 환관문 보조키, 락히지 등 여성안심 5종 세트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불법촬영 점검서비스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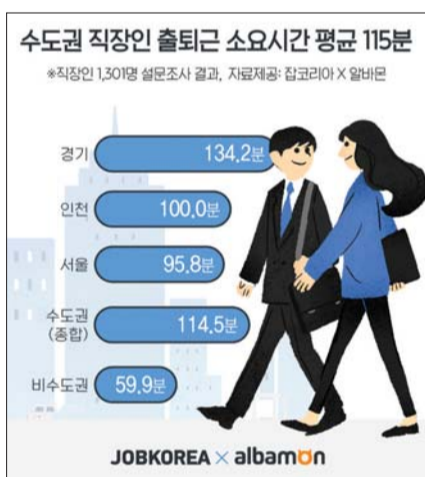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로 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안심이 앱에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한 기능을 추가한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폭력 예방·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신종 온라인그루밍 범죄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해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문 실장은 "50% 초반에 머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미래 국가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우선 추진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스위스,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임금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성별임금격차보고법'을 통해 25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의 경우 남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성과급 차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임금공개법'을 도입해 2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직원의 임금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수도권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 '115분'

잡코리아·알바몬 1301명 설문조사
경기도 134분·인천 100분 정도 소요



수도권 중 경기도 직장인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1301명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개방형으로 묻은 결과, 하루 평균 103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직장인 출퇴근 시간은 ▲경기 지역 직장인이 134.2분으로 가장 길었고, ▲인천이 100분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도 95.8분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114.5분을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 직장인들의 출퇴근시간은 59.9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특히 인천을 제외한 경기지역은 이보다 두 배 이상 긴 시간을 길 위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수도권 직장인들이 평소 출퇴근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수단은 '버스-지하철 환승(32.4%)'이었다. 이어 '지하철

(29.1%)', '버스(19.6%)' 등 5명 중 4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었다. 반면 비수도권 직장인들은 '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높았던 가운데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한다는 응답도 27.6%로 높았다. 출퇴근길에 가장 많이 하는 일(복수응답)은 ▲음악 감상(56.3%)이었다. 이어 ▲모바일 메신저 및 SNS(28.4%)와 ▲잡자기·휴식(28.0%)이 근소한 차이로 2, 3

위를 다퉜다. ▲뉴스·컨텐츠·정보를 검색(23.8%)하거나 운전, 도보 등 ▲이동 자체(21.1%)를 한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기타 의견으로는 ▲동영상 감상(18.4%), ▲모바일 게임(13.2%), ▲웹소설, 웹툰 등 e-북 독서(12.7%)를 한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출퇴근길 직장인들의 가장 친한 친구는 모바일인 셈이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음악 감상'이 1위를 차지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은 낮아졌다. 20대는 '모바일 메신저'(37.3%) 이용이 2위로 많았다. 30대는 '휴식'(25.8%)이 '뉴스 검색'(24.5%)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40대 이상은 '운전, 도보 등 이동'(29.4%)에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출퇴근길 최고의 스트레스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이라는 현실'(50.9%)이 1위였고, '차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내 몸(42.5%)', '사람이 너무 많은 만원 버스와 지하철(31.7%)', '너무 먼 회사와 집의 거리(29.3%)', '교통체증(19.1%)' 순으로 꼽혔다. /한용수 기자 hys@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3년간 46명 사상자

서울시, 인명피해 최대장소는 고시원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근 3년간 총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고시원이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2016년 276건, 2017년 200건, 지난해 224건 등 매년 200여건 이상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016년 10명, 2017년 7명, 2018년 2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2018년 11월 9일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18명(사망자 7명·부상자 11명)의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한 건의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고시원이 25명(사망자 8명·부상자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점(부상자 11명), 노래방(사망자 1명, 부상자 2명)이 뒤를 이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에 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서 5만부를 제작·보급한다. 가이드북에는 ▲다중이용시설 훈련방법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자가진단 방법 ▲심정지 대응 시나리오 ▲화재, 지진, 붕괴 등 재난유형별 대응요령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안전점검표, 소방훈련 결과 기록부, 자체훈련일지 등 각종 서식과 함께 대피계획도·주변약도·그리기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실렸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기도, 30억원 투입... '2019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충전기 161기·콘센트 300개 설치

경기도는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기차충전기 161기(급속 136기, 완속 25기)와 이동형충전기용 콘센트 300개를 설치하는 등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2019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은 크게 ▲공용충전기 설치운영 사업 ▲한국에너지공단 협업사업(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운영사업)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 설치지원 등 3개 사업으로 나뉜다.

먼저, 도는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총 111기(급속 86대, 완속 25대)

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접근이 용이하고 충전 중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있는 공영주차장에 충전기가 집중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연천, 여주, 과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 충전기를 우선 설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협업을 통해 편의점, 식당, 주유소 등 도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시설 주변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사업자에게 1기당 500만 원씩 총 50기분의 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민간 참여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차

공간부족 및 입주민 반대 등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총 300개의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를 설치하는 계획도 새롭게 추가됐다.

공동주택단지 옥외주차장 등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당 최대 100만 원, 주택단지 1개소 당 최대 3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3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화성시 유치

비행통제 운영센터 국비 60억 확보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에 오는 2020년까지 국내 다섯 번째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조성된다.

7일 경기도와 화성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은 지난 5일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대상지로 화성시를 단독 선정했다. 국내에는 현재 강원 영월과 충북 보은, 경남 고성에 전용 비행시험장이 있으며 인천시에 조성 중이다.

화성시에 조성될 드론 전용 비행장은 건축 연면적 1,000㎡ 규모의 비행통제 운영센터와 길이 200m, 폭 20m 규모의 활주로, 정비고, 이착륙장 등이 들어선

다. 비행통제 운영센터 설비에 들어가는 건축비와 시스템 구축비 60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오는 2020년 12월까지 조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입지는 경기도와 화성시, 항공안전기술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전용 비행시험장에는 드론비행 시험 전용 장비가 구축돼 고성능 드론의 비가시권·장거리 비행에 대한 안전한 추적감시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번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유치로 300m이내 고고도(高高度)비행, 야간비행, 비가시권 비행 등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어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김승열 기자